

산림청 -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직접일자리/공공업무지원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산림청/산불방지과, 산림청/산사태방지과,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 '21년 평가등급 :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개선 필요(감액)), 산사태현장예방단(양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개선 필요), 산림보호지원단(양호)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취약시기 대응 및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예방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사업 내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예방 및 봄·가을 산불조심기간 산불진화
 - (산사태현장예방단)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산사태 응급복구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병해충 예비관찰, 발생조사 및 긴급방제
 - (산림보호지원단)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감시 및 산림정화활동

□ 예산 및 재원 : 일반회계

〈표 1〉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예산 및 재원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결산(집행률)			(%)
□ 산림재해일자리	95,745	7,801	100,533 (98.5)	98,950	3,205	3.3

주: 집계시점과 집계방식의 차이로 결산(집행률)은 담당부서(산림청)가 자체 집계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담당부서에 의하면 '20년 결산(집행률)은 100,533백만원(98.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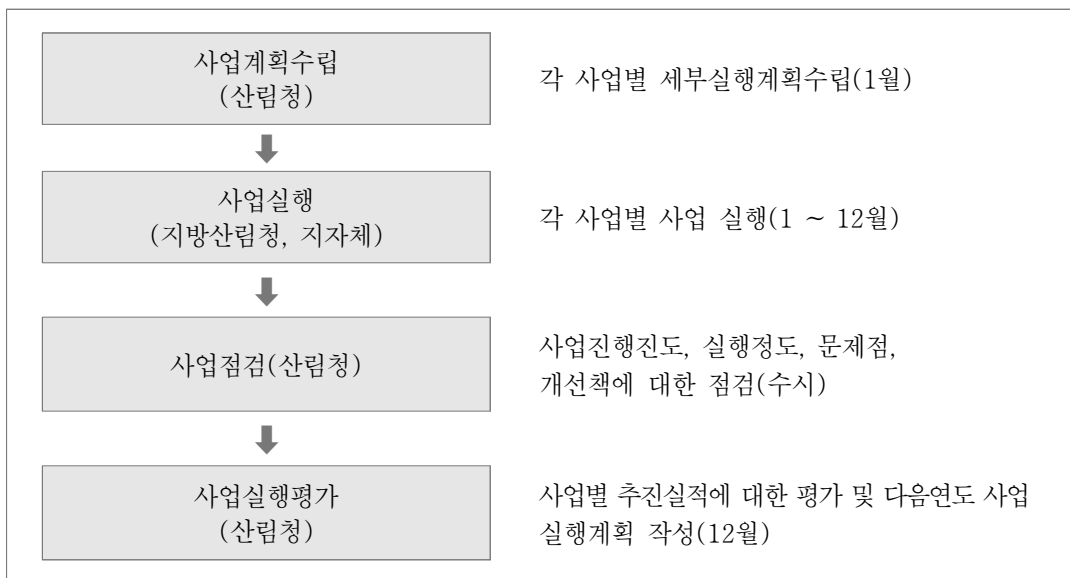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산림보호법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 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 제45조의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

□ 주요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취업취약계층 및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의 유휴 인력

□ 사업운영 개요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68,720원/일 → 69,760원/일)
- 산사태현장예방단 108명 증원('20년 652명 → '21년 760명)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전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자는 11,224명으로 공공업무지원형 참여자의 25.8%에 해당하며,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전체 참여자의 79.3%에 해당
- (성별) 성별로는 남성 비율이 97.4%로 참여자의 대부분을 차지
- (연령별) 연령대별로는 장년층(55~64세) 참여자 비율이 4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령층(65세 이상)이 33.5%, 중년층(35~54세)이 19.5%, 청년층(15~34세)이 2.6%의 순으로 나타나 참여자 대다수가 장년층 이상 고연령대에 속함

○ 산사태현장예방단

- (전체) 산사태현장예방단 참여자는 551명으로 공공업무지원형 참여자의 1.3%에 해당하며,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전체 참여자의 3.9%에 해당
- (성별) 성별로는 남성 비율이 98.0%로 참여자의 대부분을 차지
- (연령별) 연령대별로는 장년층(55~64세) 참여자 비율이 41.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령층(65세 이상)이 39.7%, 중년층(35~54세)이 13.4%, 청년층(15~34세)이 5.4%의 순으로 나타나 참여자 대다수가 장년층 이상 고연령대에 속함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 (전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참여자는 1,583명으로 공공업무지원형 참여자의 3.6%에 해당하며,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전체 참여자의 11.2%로 참여자 규모가 큰 편
- (성별) 성별로는 남성 비율이 97.1%로 참여자의 대부분을 차지
- (연령별) 연령대별로는 고령층(65세 이상) 참여자 비율이 4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년층(55~64세)이 42.3%, 중년층(35~54세)이 11.9%, 청년층(15~34세)이 2.2% 순으로 나타남

○ 산림보호지원단

- (전체) 산림보호지원단 참여자는 792명으로 공공업무지원형 참여자의 1.8%에 해당하며,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전체 참여자의 5.6%로 참여자 규모가 크지 않은 편
- (성별) 성별로는 남성 비율이 95.6%로 참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성 참여자 비율은 4.4%로 낮은 편에 속하였으나 타 산림재해일자리 내역사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
- (연령별) 연령대별로는 고령층(65세 이상) 참여자 비율이 4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년층(55~64세)이 39.0%, 중년층(35~54세)이 13.1%, 청년층(15~34세)이 5.1% 순으로 나타나 참여자 대부분이 장년층 이상 고연령대에 속함

〈표 2〉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참여자(개인)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직접일자리 전체	970,557 (100.0)	327,960 (33.8)	642,597 (66.2)	36,794 (3.8)	58,650 (6.0)	100,584 (10.4)	774,529 (79.8)
공공업무지원형 전체	43,513 (100.0)	15,813 (36.3)	27,700 (63.7)	1,473 (3.4)	18,499 (42.5)	17,676 (40.6)	5,865 (13.5)
산림재해일자리	14,150 (100.0)	13,761 (97.3)	389 (2.7)	393 (2.8)	2,559 (18.1)	6,193 (43.8)	5,005 (35.4)
산불예방진화대	11,224 (100.0)	10,927 (97.4)	297 (2.6)	288 (2.6)	2,192 (19.5)	4,987 (44.4)	3,757 (33.5)
산사태현장예방단	551 (100.0)	540 (98.0)	11 (2.0)	30 (5.4)	74 (13.4)	228 (41.4)	219 (39.7)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583 (100.0)	1,537 (97.1)	46 (2.9)	35 (2.2)	189 (11.9)	669 (42.3)	690 (43.6)
산림보호지원단	792 (100.0)	757 (95.6)	35 (4.4)	40 (5.1)	104 (13.1)	309 (39.0)	339 (42.8)

주: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각의 합이 전체의 합과 같지 않을 수 있음

〈표 3〉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성과지표

(단위: %)

	반복 참여율	취약 계층 참여율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 소요 기간
				6개월 (180일)	
직접일자리 전체	3.1	57.3	37.7	37.8	91.5
공공업무지원형 전체	6.5	46.8	47.6	31.7	80.5
산림재해일자리	6.1	61.6	50.9	17.7	93.8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3	62.2 (138.2)	50.7	14.8	97.0
산사태현장예방단	6.7	61.3 (136.2)	60.3	30.0	82.3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1.4	58.2 (129.3)	47.9	30.5	81.9
산림보호지원단	5.3	60.7 (134.9)	46.6	16.0	53.7

주: 취약계층 참여율의 () 안의 수치는 2020년 재정일자리사업 합동지침상의 취약계층 참여 목표 대비 달성 비율임

□ 만족도 조사 결과

〈표 4〉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점검		
직접일자리 전체	3.92	3.92	3.79	4.06	3.66	3.38	3.81	4.05	4.09	3.88
공공업무지원 형 전체	3.89	3.89	3.77	4.07	3.71	3.32	3.76	3.99	4.07	3.84
산림재해일 자리	3.92	3.90	3.76	4.00	3.55	3.40	3.77	4.09	4.10	3.90
산불예방 진화대	3.81	3.82	3.60	3.83	3.25	3.39	3.56	3.96	4.05	3.76
산사태현 장예방단	4.07	4.04	3.94	4.20	3.64	3.56	3.96	4.32	4.24	4.08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85	3.82	3.68	3.93	3.58	3.28	3.65	3.98	4.08	3.82
산림보호 지원단	3.93	3.90	3.84	4.06	3.74	3.36	3.92	4.10	4.04	3.94

주: 1)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2) 전반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절대적 만족도: 사업 내용 관련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

주관적 만족도: 사업 참여 후 사업에 대해 가지게 된 긍정 인식 정도 / 상대적 만족도: 사업 참여 전 기대대비 만족도

〈표 5〉 산림재해일자리 참여자 민간일자리 희망 및 이행여부 조사결과

(단위: 명, %)

	전체	민간일자리 희망	민간일자리 이행
직접일자리 전체	4,609	47.3	40.3
공공업무지원형 전체	953	54.9	40.9
산림재해일자리	450	52.9	36.3
산불예방진화대	250	62.4	28.8
산사태현장예방단	50	60.0	43.3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00	51.0	25.5
산림보호지원단	50	38.0	47.4

주: 만족도 조사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 참여 종료 후 민간일 자리를 희망하였는지, 실제 민간일자리 이행에 성공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정성지표별 평가결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사업중요도) 본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일 경험 및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산불지상진화와 산불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중요성이 인정됨

* 법적 근거: 산림보호법 제41조

* 국정 과제: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 마련(55-5), 산림자원 순환 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81-4)

- '20년 계획인원 대비 채용인원 110%를 달성*

* '20년 계획인원 10,110명, 채용인원 11,103명 (출처: 담당부처 제출자료)

- (일자리사업 성과) 사업고유 목적상 취약계층 우선 선발 지침을 준수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민간일자리 이동에 한계가 있음

- (취약계층 선발) 참여자는 체력검사를 필수적으로 통과하여야 하며, 산불진화장비, 안전교육 등 전문기술 교육(2주) 수료자를 우대하는 등 참여자 선발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원칙이 지켜지는데 한계*

* '20년 저소득층 참여인원은 전체의 약 36%(3,998명) 수준 (출처: 담당부처 제출자료)

- (민간일자리 이동) 사업 종료 후 민간일자리 이동을 위한 취업연계 지원을 안내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일자리 이행 실적을 더욱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는 특수 직종의 전문직을 채용하는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민간일자리 취업 기회가 거의 없고 참여자 역시 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음
- (운영 적절성) 지역 내 산림면적을 기초로 참여자 배정을 차등 지원하는 배정기준 하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 겨울철 건조 및 산불발생이 많은 지역과 봄철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조기 선발·운영
- (제도개선 노력) 행정안전부 합동 산불 대응태세 점검을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장비 운영실태 확인, 우수사례 발굴 등을 수행
 - 의견수렴 노력은 인정되나, 이를 제도개선에 활용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산사태 현장예방단>

- (사업중요도) 본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일 경험 및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 주민대피 안내 등 산사태 예방·대응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중요성이 인정됨
 - * 법적 근거: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5
 - ** 국정 과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81-4)
- '20년 계획인원(1,012명) 대비 채용인원 107%(1,084명)를 달성
- (일자리사업 성과) 사업고유 목적상 취약계층 우선 선발 지침을 준수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민간일자리 이동에 한계가 있음
 - (취약계층 선발) 참여자는 선발시 유관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장비 활용 능력자 등을 우대하여 선발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에 한계가 있음*
 - * '20년 저소득층 참여인원은 전체의 약 38%(389명) 수준 (출처: 담당부처 제공자료)

- (민간일자리 이동) 사업 종료 후 민간일자리 이동을 위한 취업연계 지원을 안내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일자리 이행 실적을 더욱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 (운영 적절성) '20년 추경으로 예산과 참여인원이 늘어났으나 차질 없이 달성
 - 시·도 및 소속기관별 산사태 취약지 지정관리 현황, 산사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한 인원배분을 하는 등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짐
 - 취약지역점검표를 만들어 활용하는 등 작업표준화를 위해 노력
- (제도개선 노력) 지침개정*, 산사태현장예방단 5개 지방청 확대 운영 등 외부 지적을 받아들여 사업개선을 위해 노력
 - *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산림공무원 등 우대가능성 방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 (사업중요도) 본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일 경험 및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및 여건 등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예찰·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요성이 인정됨
 - * 법적 근거: 산림보호법 제20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
 - ** 국정 과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81-4)
- '20년 계획인원(1,328명) 대비 채용인원 약 156%(2,066명) 달성*
 - * '20년 저소득층 참여인원은 전체의 약 40%(836명) 수준 (출처: 담당부처 제출자료)
- (일자리사업 성과) 매년 취업취약계층 채용목표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실습 강화를 통한 민간일자리 이동을 지원
 - (취약계층 선발) 취업취약계층에 가산점(10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취약계층의 채용목표비율을 매년 상향 조정*
 - * '18년 30% → '19년 35% → '20년 45%

- (민간일자리 이동) 민간일자리 이직 활성화를 위해 직무교육 시 작업요령 및 현장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며, 참여 종료 30일 이전에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지원하도록 지침에 안내
 - * 민간일자리에서 활용가능한 기술 교육 위주의 전문기술교육(5일) 실시
- (운영 적절성) '20년 추경으로 예산과 참여인원이 늘어났으나 차질 없이 달성(99.1%)
 - 산림병해충 발생상황, 예찰·방제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인력과 예산을 배분
- (제도개선 노력) 외부 지적을 받아들여 지침개정* 등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 * 취업취약계층 채용목표비율 상향, 산림공무원 등 우대가능성 방지

<산림보호지원단>

- (사업중요도) 본 사업은 민간인력을 활용한 불법 산림훼손 계도·단속 등 산림보호 분야 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 경험 및 교육을 제공하여 그 중요성이 인정됨
 - * 법적 근거: 산림보호법 제17조
- '20년 계획인원(1,384명) 대비 채용인원 약 130%(1,802명) 달성*
 - * '20년 저소득층 참여인원은 전체의 약 16%(293명) 수준 (출처: 담당부처 제공자료)
- (일자리사업 성과)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참여를 제한하여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나* 민간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지원은 부재
 -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참여 제한 (가구소득기준 중위 65% 초과)
- (운영 적절성) 3차 추경으로 예산과 참여인원*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예산집행률 98.4%로 차질 없이 수행
 - * 본 예산 인원 128명, 추경으로 인한 증원 1,256명
- (제도개선 노력)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개선 노력*
 - *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20년에 지원단을 시·군지역까지 배치 확대

4 개선권고

□ 평가등급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개선필요(감액)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 개선필요

- 산림재해일자리는 사업특성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신체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참여자 선발이 산림 인근지역 주민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 반복 참여를 제한하기 어려움
 - 활동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해 참여종료 후 민간일자리 이동에 업무 경험이 크게 기여하기에 한계가 있어 취업지원을 체계적·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일자리 취업 의욕이 있는 참여자 대상으로 참여 기간 중에 고용센터와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고용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종료 후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령자고용장려금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른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인근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이용하여 참여종료자 대상 고용연계 서비스 제공 검토
- 민간일자리 이행지원을 강화할 필요
 - 내역사업별로 사업 종료 후 민간일자리 이동을 위한 취업연계 지원을 안내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평균에 비해 실적이 낮아 민간일자리 이행 실적을 더욱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 코로나19 유행이 '21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21년 하반기 대응 방안 고민 필요